

# 학교비정규직 노조, 25일 총파업 예고

전국 9만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교육당국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두달 가까이 집단교섭을 해오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지난 10일 투쟁현장을 방문한 김상곤 교육부장관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의 성실 교섭 의지를 존중해 15일간 이어온 단식농성은 중단기로 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 3개 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비연대회의)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을 계속 외면하다가 긴 연휴기간이 끝난 어제에서야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들이 단식농성을 찾아왔다"며 "사용자측의 구체적인 임금변화 발표는 없었지만 집단교섭의 파행과 단식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집단단식 투쟁을 중단하고 노사간 대화를 재개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내용없는 성실교섭 약속만을 믿고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전국 9만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오는 2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예정된 25일 총파업전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있다"며 "이제 정부와 교육청이 결단해야 한다. 시간끌기식 교섭태도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필수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최소합의 요구인 2년차부터 근속수당 3만원 제도를 올해 우선적으로 도입해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은 "정와대와 교육부,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정규직대비 60%에 불과한 임금차별을 받아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계속적인 희생과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의 태도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더이상 시간끌기는 용납할 수 없다. 근속수당 제도를 도입해 신속히 임금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학비연대회의는 정기근무가

## 김상곤 부총리 농성장 방문에 협상 이어가기로 근속수당 도입 등 결과 없을 경우 파업 불가피

산금의 근속수당 전환, 연간 상승폭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에 대해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시간을 현 24시간에서 다른 공공부문과 같이 20시간으로 줄여야 근속수당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뉴시스



친구들이 잘 봐!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문화예술공원 힐링텃밭에서 열린 전통 벼 수확 체험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탈곡체험을 하고 있다.

## 5·18단체·법무부, 광주교도소 암매장지 발굴 논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의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안팎에 대한 발굴 조사 논의를 위해 법무부와 5·18단체가 만난다.

11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법무부에서 김양래 기념재단 상임이사 등 5·18 단체 관계자와 법무부 담당자들이 만나 광주교도소 안팎 발굴 조사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는 광주교도소 발굴 조사를 위한 재단 측의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정취할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교도소 부지가 넓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장소가 몇 곳인지, 발굴 작업 이후에는 어떤 작업을 해 나갈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발굴 조사의 목적과 취지 등을 설명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교도소 안팎의 암매장 발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16~20일 교도소 현장조사, 10월말 발굴 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월 단체는 이번 편답이 사실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만큼 교도소 내 발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27일 법무부는 재단이 요청한 교도소 현장 조사와 발굴 작업을 한 차례 거부했다. 현재 국회에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2건이 발의돼 심의 중이기 때문에 법안의 심의 경과 등을 지켜보면서 관련 절차를 따라 조치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다만 5월 단체 대표들이 상경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후 기념재단은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기념재단은 박 장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 협조 공문을 다시 보냈다.

이기봉 5·18기념재단 사무처장은 "이번 편답이 사실상 박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며 "처음 공문을 보냈을 때 지금 당장은 힘들다는 입장이었다. 현재는 그 당시보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3공수 여단과 20사단 병력들이 주둔했던 곳이다. 5·18 직후 교도소 관사 뒤에서는 시신 8구, 교도소 앞 야산에서는 시신 3구가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80년 5월31일 '광주사태 진상 조사' 문건에는 이른바 '교도소 습격 사건'으로 민간인 27명(보안대 자료 28명)이 사망했다고 기록돼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16~17명의 신원과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최소 52명이 교도소 내에서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재단은 현재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재소자를 통해 교도소 내부 암매장 장소에 대한 증언을 확보했다.

또 5·18 당시 광주교도소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 부대원이 남긴 메모에서 암매장 관련 약도를 찾았다.

최혜규 기자

## 푸켓·끄라비 해변 금연...벌금 최대 342만원

다음달부터는 푸켓과 끄라비 등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태국 유명 해변 20곳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11일 현지매체 더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해양·해안자원국은 해변에 쌓인 담배꽂이를 문제삼아 다음달부터 유명 해변 20곳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흡연이 적발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10만바트(약 342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연 해변으로 지정된 곳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푸켓의 빠통, 촌부리의 파타야·방센, 끄라비의 프라 에, 카이낙 등이다.

해양·해안자원국은 "흡연자가 해변에 가기 전에 흡연구역을 마련해 놓을 것이다. 담배를 피우면서 해변을 거닐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담배꽂이가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승객과 관광객들이 배 위에서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 日 규슈 신모에다케 화산 분화

일본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사이에 있는 신모에다케 화산이 11일 아침에 분화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더 큰 규모의 폭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화구 주변 경보를 발표했다.

또 분화 경계 수준도 '입산 규제'인 레벨 3으로 상향 조정하고 화구에서 2km 범위에서 화산 쇄설류(화산 폭발로 인해 화산재, 연기, 암석 등이 뒤섞인 구름이 고속으로 분출되는 현상) 등에 조심하도록 당부했다.

신모에다케 화산의 분화 경계 수준이 레벨3이 된 것은 201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기상청에 의하면 오전 5시부터 시작된 분화로 화산 연기는 300미터 높 이까지 치솟았으며, 폭발도 연속해서 발생했다.

또 지하의 마그마와 화산 가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화산성 진동도 관측되고 있으며 이 진동의 폭은 점차 커지고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다.

신모에다케 화산은 2011년부터 화산성 지진과 소규모 분화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더 빈번해져 지난 5일에는 분화 경계 레벨을 1에서 2로 올렸다.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분화로 인한 부상자 및 피해 신고는 없으나, 신모에다케화산에서 약 9km떨어진 초등학교에 세워진 자동차에 화산재가 쌓인 것이 확인됐다.

신모에다케 화산은 1716년 11월 대분화 때 사망 5명, 부상 31명 등의 인명피해와 함께 가옥 600채가 소실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기록했다.

1959년에는 미야자키현 고바야시시, 타카히라초 등에서 화산재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 필리핀서 한국인 50대 숨진채 발견

필리핀 중부 일로일로 시 자로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10일 오전 한국인 남성 A(57)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현지방송 ABS-CBN이 보도했다.

A씨는 앞드려 누운 채로 발견되었으며, 그의 몸 위에는 얇은 밧줄이 놓여 있었다.

필리핀 경찰은 살해 용의자로 A씨의 아들 B(25)씨를 체포해 기소했다. 현재 B씨는 경찰 유치장에 수감 돼 있는 상태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필리핀 북부 벵게트 주 바기오에서 돌아왔다. 이후 A씨와 그의 아내, B씨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오전 9시30분께 가사도우미가 도착했을 때 A씨 가족들은 그에게 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필리핀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그의 아내에게 흉기를 겨눴고, 아들이 이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 있던 얇은 밧줄과 깨진 접시 조각 등을 미루어보아 A씨는 폭행치사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씨의 손에는 밧줄 자국이 남아있었다.

가사도우미는 A씨 부부가 평소에도 자주 싸웠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A씨 부부가 한국어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일로일로, 마닐라, 바기오 등에 여러 사업체를 소유한 사업가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필리핀에서 교민이 살해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4월 세부 리푸라푸 시에 거주하던 교민 C(47)씨가 현지 강도가 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다. 필리핀 경찰은 C씨 집 인근에서 용의자 D(28)씨와 E(38)씨를 체포했다.

뉴시스

사랑중심·생명중심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 당신의 작은 배려가 선진 교통공동체를 만듭니다!

- 운전자를 배려하는 '방향지시등 사용'
- 보행자를 배려하는 '정지선 지키기'
- 통행인을 배려하는 '무단횡단 안하기'